

터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3.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국 명	터키	수 도	앙카라(Ankara)
면 적	78만 km ² (한반도의 3.5배)	G D P	8,412억 달러 (2017 ^e)
인 구	80.6백만 명 (2017 ^e)	1 인 당 GDP	10,434 달러 (2017 ^e)
정 치 체 제	의원내각제	통 화 단 위	Turkish Lira(YTL)
대 외 정 책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환 율(달러당)	3.6 (2017 ^e)



- 터키는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80.6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의 접경지역인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정의개발당(AKP)이 2002년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대통령제 개헌 통과(17.4월)로 일인 집권 체제가 강화되어 터키 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12월 유럽의 난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EU는 터키의 난민 수용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EU 가입을 위한 협상을 공식 재개하였으나, 군부 쿠데타(16.7월) 시도 이후 유럽의회는 터키 정부의 사형제도 재도입 논란, 과도한 언론 탄압 등으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16.11.24)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5.2	6.1	3.2	5.1	3.5
소비자물가상승률	8.9	7.7	7.8	10.9	9.4
재정수지 / GDP	-1.4	-1.3	-2.3	-3.2	-2.4

자료: IMF

□ 관광산업 회복과 민간소비 활성화, 수출 호조로 경제 회복세 완연

- 터키는 2016년 러시아의 경제 제재, 군부 쿠데타 시도, 테러 발생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3.2%까지 하락하였음.
 - * '15.11월 터키 공군이 러시아 전폭기를 격추한 데 따른 경제제재로, 터키의 농산물 수출, 관광업, 건설업 등에 악영향을 끼침.
-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9%p 상승한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 해제 이후 러시아 관광객 유입 재개로 관광산업이 회복되고 정부 재정부양책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된 점, 리라화 약세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이 주요 요인임.
 - 또한 '17.4월 대통령중심제 개헌안 통과로 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경제 불안 요소를 완화시킴.
- 2018년에는 정부의 긴축재정,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수요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5%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리라화 약세, 공공요금 인상으로 10%대 전후의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달러화 대비 리라화 가치 하락*, 국제 유가 상승으로 2017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3.1%p 상승한 10.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리라/미 달러 환율(연중) : 2.19('14)→ 2.12('15)→ 3.02('16)→ 3.65('17)
- 2018년에도 전기요금, 도로통행료, 자동차 구입세 등 공공요금 인상과 민간수요 확대로 물가상승률이 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터키 정부는 물가상승률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 축소 전망

-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군부 쿠데타 시도 이후 투자심리 악화, 관광 사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8년에는 각종 보조금 폐지와 긴축정책에 힘입어 -2.4%로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 터키 정부는 보조금 폐지, 세제 개편을 통한 세수기반 확보, 정부예산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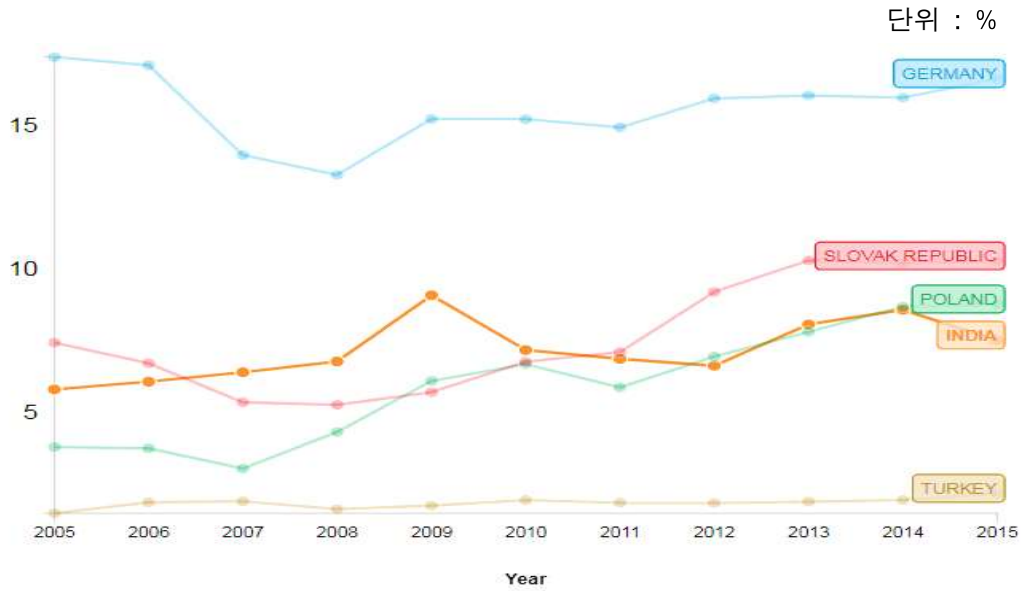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가공무역과 저부가가치 위주의 낮은 제조업 경쟁력

- 투자청에 따르면 산업별 수출액의 대부분을 제조업이 차지('17년 93.7%)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중간재를 해외에서 수입해 터키에서 조립·생산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며 주요 수출 품목 또한 의류·섬유, 식료품, 금속 제품 등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임.
- 터키는 세계은행에서 집계한 제조업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 수출 비중이 2%에 불과해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나 인도, 그리고 터키와 같이 EU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나 슬로바키아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성장세도 미미한 수준임.
* 항공 우주, 컴퓨터, 의약품, 과학 기기 및 전기기계와 같이 연구개발(R&D) 집적도가 높은 제품군을 의미함.

< 그림 1 > 제조업 수출 중 첨단기술제품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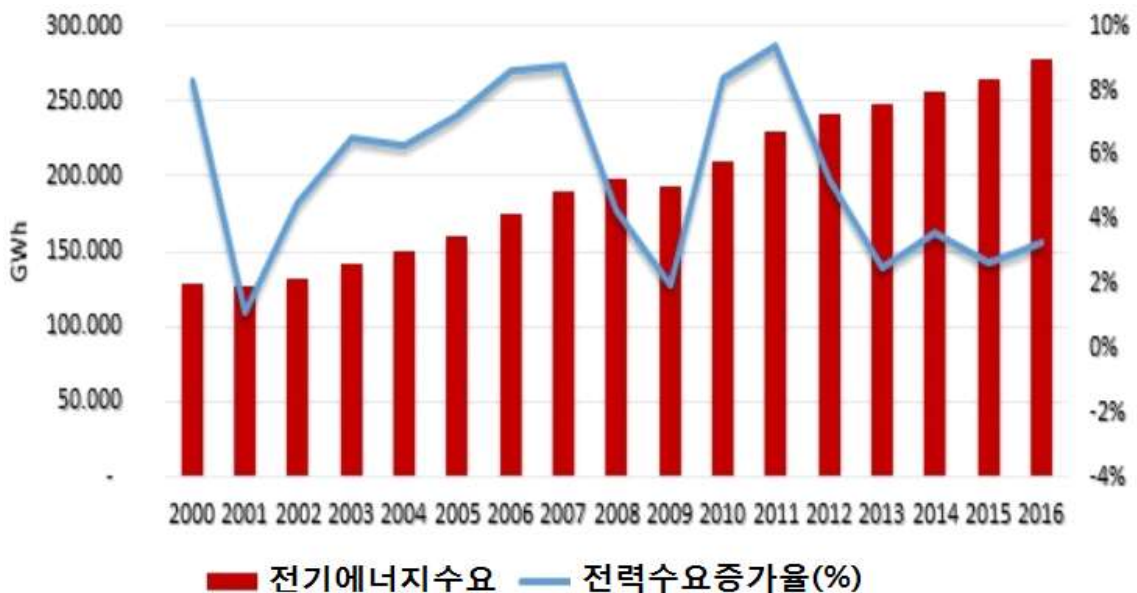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High-technology exports(% of manufactured exports)

□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

- 터키는 인근 중동 국가와 달리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 터키 외교부에 따르면 국내 수요의 74%를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수요 증가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그림 2 > 터키 전기에너지 수요 및 증가율



자료 : 터키 외교부(www.mfa.gov.tr)

- 주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연료를 수입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지열, 풍력, 수력, 태양광) 인프라 확충 및 원자력발전소 도입 노력 등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나, 앞으로도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임.

나. 성장 잠재력

□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위치와 풍부한 노동력 보유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슬람 문화권 국가로 중동 국가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동,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음.
- 유럽 국가 중 독일에 이어 2위 규모에 해당하는 많은 인구(2017년 기준 80.6백만명)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68%에 달하여 노동력이 풍부하며 증가율 또한 유럽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임.

□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수송 허브 역할 기대

- 터키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 영토를 지나는 수송관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수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터키 외교부에 따르면 인근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 확인매장량 규모는 전세계 확인매장량의 75%에 달함.
 -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수송관으로는 ①Baku-Tbilisi-Ceyhan(BTC) 송유관과 ②Baku-Tbilisi-Erzurum(BTE) 천연가스관 등이 있으며,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럽(이탈리아)까지 연결하는 ③ Trans Adriatic Pipeline(TAP) 프로젝트와 ④Trans Anatoilian Pipeline(TANAP) 사업이 있음.

< 그림 3 > 터키의 주요 송유관 및 천연가스관



자료 : 터키 외교부(www.mfa.gov.tr)

다. 정책성과

□ 건국 100주년(2023년)을 목표로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추진

- 계획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이스탄불 해저 3층 터널 건설 사업, 이스탄불 대운하 사업이 있으며 사업이 실현될 경우 유럽-아시아 대륙 연결성과 흑해-지중해 연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이스탄불 해저 3층 터널 건설 사업 >

- 마르마라이(지하철용 해저터널), 유라시아 터널(자동차용 해저터널)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저터널로 차량, 지하철 모두 통행이 가능하도록 건설하며 총 사업비는 35억 달러 규모임.

< 이스탄불 대운하 사업 >

-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총 연장 43km, 폭 400m, 수심 25m 규모의 운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보스포러스 해협의 교통난 해결이 기대되며 총 사업비 1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사업임.

□ 2023년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은 달성이 어려울 전망

○ 2011년 에르도안 대통령은 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30'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나 현재 수준을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 GDP 2조 달러*, 국민소득 2만 5,000 달러**, 수출 5,000억 달러 달성 등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2023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15%에 가까운 경제성장률과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구조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개혁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 GDP(억 달러): 8,412('17^e) → 10,190('20^f) → 11,321('22^f)

** 1인당 GDP(달러): 10,434('17^e) → 12,282('20^f) → 13,489('22^f)

→ IMF World Economic Outlook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43,552	-32,118	-32,121	-38,945	-41,468
경상수지 / GDP	-4.7	-3.7	-3.8	-4.6	-4.6
상 품 수 지	-63,597	-48,114	-40,859	-58,355	-60,572
수 출	168,926	151,970	150,161	166,481	181,437
수 입	232,523	200,084	191,020	224,836	242,009
외 환 보 유 액	106,906	92,921	98,615	96,174	95,532
총 외 채 잔 액	435,402	407,448	424,198	438,806	467,680
총외채잔액 / GDP	43.0	46.1	46.9	52.2	51.6
D. S. R.	19.3	20.5	33.4	34.3	28.7

자료: IMF, EIU, OECD.

□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세 지속

- 2017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0.8%p 상승한 -4.6%로 추정되며,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가 가장 큰 원인임.
 - 투자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수입증가세(전년 대비 17.7%p 상승)가 수출증가세(전년 대비 10.2%p 상승)를 상회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확대됨.
 -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의 경제회복으로 수출이 성장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국내수요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 확대로 수입액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이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의 주요 요인이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경상수지 적자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수지는 2016년 관광객 급감*에 따른 관광수지 타격에서 회복하여 2017년 전년 대비 33.5%p 상승한 205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고 향후에 흑자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 2015년 3,60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6년 2,535만 명으로 급감함.

□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 지속

- 터키 중앙은행(CBRT)의 리라화 약세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군부 쿠데타 이후 관광산업 위축도 외환보유액 감소에 기여함.
 - 2016년 이후 관광업 및 외국인 투자 유입액의 회복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986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2017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950억 달러 중반 수준에 그침.

□ 외채잔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채 구조는 양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부채**와 단기부채 비중이 30%대 미만으로 낮아 외채구조는 양호한 편임.
 - * 총외채잔액/GDP 비중(%): 46.1('15) → 46.9('16) → 52.2('17°)
 - ** 공공부채/GDP 비중(%): 27.5%('15) → 28.1('16) → 27.9('17°)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6~17년 3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8년 이후 외채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고 수출액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28.7%로 개선될 전망이다.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7. 4월 대통령 중심제 개헌안 통과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 2017. 4월 대통령제 전환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하여, 차기 대선인 2019.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임.
 - 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정 수반으로 활동 중이나 현행법 상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총리에 비해 제한적·간접적 권한만 보유함.
 -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강화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 5년 대통령 임기의 2회 연임 가능,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의회 기능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리, 대통령직을 포함 총 27년의 장기집권이 예상됨.
 - 2003년부터 총리직 수행, 2014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19년까지 임기이나 대선 이후 개헌안 시행을 통해 2회까지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9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함.
 - 개헌안 통과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 강화 우려가 제기되고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 발생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으나 야권세력 약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2016. 7월 군부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연장 지속

- 집권 이후 이슬람주의를 강화해 온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2016. 7. 15.에 터키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진압하고 곧바로 반대세력에 대한 대규모 숙청작업에 들어감.
 - 쿠데타 발생 직후에 민주주의 수호와 테러 위협으로부터 터키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2018.1월에 6차 연장(3개월)까지 단행함.
 - 터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행정명령*을 이용해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 및 인권 침해 조치를 하여 터키 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 테러 용의자의 법정 대리권 박탈 및 기소 없이 최장 30일까지 구금·체포 가능, 무영장 수색 가능, 자산압류절차 간소화, 구체적 혐의 없이 공직자 해임 가능.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쿠데타 이후 다수의 테러가 발생했으나 개헌 투표 통과 이후 진정세
 - 이스탄불 축구장 인근 연쇄 폭탄 테러('16. 12월, 46명 사망), 이스탄불 나이트 클럽 테러('17. 1월, 39명 사망) 등 사건 사고가 다수 발생함.
 - 2017. 4월 개헌투표 통과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되고 국가 비상사태 연장으로 테러 세력에 대한 경계와 치안 통제를 강화하면서 테러 발생 빈도는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터키 정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 아래 강도 높은 공안 통치를 펼치고 있으며, 2017.2월에는 터키군의 쿠르드 공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2,100명 이상을 연행해 조사하기도 함.

3. 국제관계

- 독자적인 균형외교가 급속히 후퇴하고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
 - 터키는 친서방 및 친아랍의 균형외교 정책을 펼쳐왔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일인 체제가 강화되면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소프트 파워 외교정책이 폐기됨.
 - 에르도안이 창당한 온건 이슬람 정당 AKP(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정의개발당)은 한 때 군부의 정치개입금지, 사형제 폐지, 소수 민족 쿠르드족 존중 정책 등의 개혁으로 무슬림 민주주의의 모델로 터키의 위상을 높였고, 중동 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였음.
 -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서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음.
- 터키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시 EU·미국과의 갈등 악화는 제한적
 - 터키는 EU가 터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터키의 EU 회원국 가입에도 냉소적 반응을 보이면서 EU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난민 문제 협조와 테러 대응을 위해 EU와의 협력 채널은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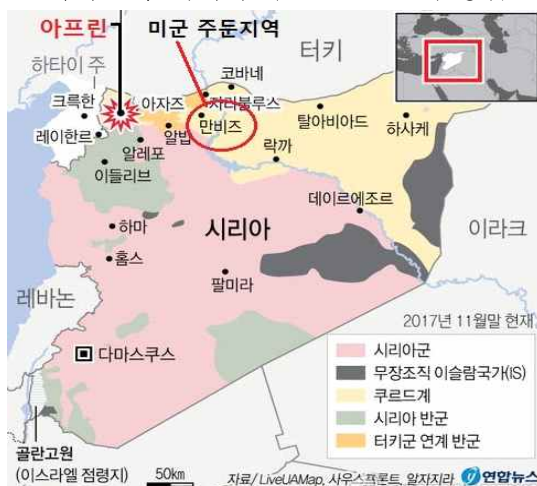
- 유럽의회는 군부 쿠데타 시도 이후 터키 정부의 반정부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숙청, 과도한 언론 탄압, 사형제도 재도입 논란, 테러방지법 관련 인권 침해 등으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EU-터키 비자 자유화 협정 체결이 가시화 단계로 이는 2016. 3월에 EU-터키 난민송환 협정 체결에 따라 터키가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 이주를 막아주는 대가로 추진되어 왔음.
 - EU는 또한 난민협정 체결시 터키 내 시리아 난민캠프 관리*를 위해 60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 * 터키는 3백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 중임.
 - 이슬람국가(IS) 세력의 유럽으로의 확산을 막고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터키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 시 EU와의 급격한 관계악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터키의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 소탕작전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었으나, 에르도안 대통령과 미국 힐러슨 국무장관이 2018. 2. 16자로 회담을 가지고 시리아 정책을 둘러싼 갈등 조정방안을 협의함.
- 터키는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 만비즈에서 철수시키고, 미군과 터키군이 이 지역에 동시에 주둔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미국 정부는 검토 입장을 밝힌 상태임.
 -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서 활동하는 인민수비대를 쿠르드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터키내 쿠르드노동당(PKK)의 분파이자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인민수비대를 포함하는 국경보안군을 구성해 시리아 북부 지역을 방어하겠다고 발표하자 크게 반발함.
 - 이에 대한 대응으로 터키는 2018. 1. 20자에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인 아프린을 전격 공습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만비즈 지역까지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 수준을 높임.
 - 미군은 쿠르드 인민수비대와 동맹을 형성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 세력 퇴치 작전을 벌였으며 향후에도 시리아 북부 지역 방어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동맹인 터키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임.

□ **에르도안 대통령의 쿠르드족 강경정책은 지속될 전망**

- 터키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저항하는 쿠르드계 시리아 반군이 IS 격퇴전에서 국제동맹군의 지상군 주력을 담당하면서 입지를 높이자 시리아 반군 전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터키 국내 쿠르드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도 한층 강화함.
- 에르도안 대통령은 권력 강화와 반대세력 축출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쿠르드족 강경대응, 대내적으로는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2019.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동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유랑민족으로 인구는 3,000만 명에 달하며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 분포해 있으며 터키 남부에 가장 많은 1,500만 명이상이 살고 있음.
 - 쿠르드족은 독립국가 설립을 목표로 쿠르드 거주 지역을 위협하는 IS와의 전쟁에 나서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주변국, 특히 터키와 이라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도 미진한 상황임.
 - * 터키·이란·시리아는 자국 내 거주하는 쿠르드족 동요를 우려하고, 이라크는 쿠르드 족이 거주하는 지역(키르쿠크 주)이 주요유전지대에 해당하여 반대함.
- 쿠르드족 분리·독립국가 건설을 둘러싼 각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IS 퇴치와 시리아 정세 악화 문제와 맞물려 단시간에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림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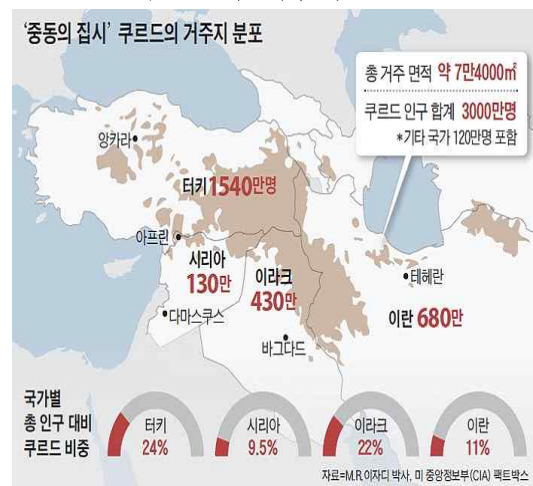
터키군의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공습



자료 : 연합뉴스 “터키, 시리아 쿠르드지역 올리브가지” 작전 개시”(18.121자) - 저자 재편집

< 그림 5 >

쿠르드족 거주지 분포



자료 : 조선일보, “폭격·지도자 체포.. 팽당하는 ‘IS격퇴 공신’ 쿠르드족”(18.2.28자)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실적은 미미한 수준

- 2017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대 터키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61억 달러, 중장기 273억 달러로 총 333억 달러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13.9백만 달러로 전체의 0.04%에 불과함.
- 2017년 9월말 기준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국제시장평가

□ OECD 기존 등급 유지

- OECD는 '17년 경제성장률이 '16년 대비 1.9%p 증가한 5.1%로 추정되고 외채상환능력도 충분한 것을 감안하여 국가신용도 등급을 기존 등급과 동일한 4등급 부여함.

□ Moody's 신용등급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 3사는 2016. 7월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불안 심화, 투자심리 악화 등을 이후로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하였음.
* S&P : BB+→BB('16.7월), Moody's : Baa3→Ba1('16.9월), Fitch : BBB→BB+('17.1월)
- Moody's는 신평3사가 공통적으로 지적해오던 구조개혁 지체와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정치 불안으로 인한 대외변동성 확대를 반영하여 2018.3.7.자로 등급을 1단계 하향(Ba1→Ba2)하였고, 이는 S&P의 BB('17.11 등급 재확정)와 동일한 수준임.
- 반면 전망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채구조 및 관리가능한 수준의 우발 채무를 사유로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조정함.
- Fitch는 2018. 1월 국가비상사태 추가 연장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과 견조한 외채상환능력, 양호한 공공부채 수준 등을 근거로 기존 BB+ 등급을 유지하고 전망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함.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8.02)	C1	(2018.02)
OECD	4등급	(2018.01)	4등급	(2017.01)
Moody's	Ba2	(2018.03)	Ba1	(2016.09)
Fitch	BB+	(2018.01)	BB+	(2017.0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57. 3. 8. 수교 (북한과는 2001. 6. 27. 수교)
- 주요협정:** 문화협정('74년), 경제기술협력협정('77년), 이중과세방지협정('86년), 원자력 평화적 이용협정('99년), 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본협정('13년), 관광협정('13), 상품무역협정('13년), 사회보장협정('15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 9월말 누적 기준 2,156백만 달러(160건)
- 교역규모**
 - 터키는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29위 교역국이자 9위 무역흑자국으로 교역규모는 2016년 터키의 정치불안과 경제성장세 둔화로 줄어들었으나 2017년 회복세를 시현함.
 - 2013년 5월 1일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 상품분야협정 발효로 터키 앞 수출이 증가하여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수입액 대비 수출액이 절대적으로 많아 무역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표 4 > 한· 터키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6,665	6,249	5,385	6,155	철강관,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수 입	655	790	742	782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부품, 의류
교역규모	7,320	7,039	6,127	6,937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터키는 2016년 러시아의 경제 제재, 군부 쿠데타 시도, 테러 발생에 따른 관광산업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3.2%까지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9%p 상승한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관광산업 회복과 민간 소비 활성화, 리라화 약세에 따른 대외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완전한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에는 정부의 긴축 재정·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수요 성장세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5%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7월 군부 쿠데타 진압과 2017.4월 대통령제 개헌 통과를 통해 일인 집권체제를 강화하고 국가비상사태 연장을 통해 정국을 장악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된 상황임.
- 2023년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낮은 제조업 경쟁력과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채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기외채, 공공부채 비중이 낮아 외채구조는 양호하여 단기적인 외채상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는 적으며 터키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 각종 보조금 삭감, 세수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외채상환능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터키의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 공격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EU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이나 IS세력의 유럽으로의 확산을 막고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터키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 시 서방세계와의 급격한 관계악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김은경(☎6255-5725)

E-mail : lenakim@koreaexim.go.kr